

국방부, 전사자→사망자 오표기… 용어사용 신중 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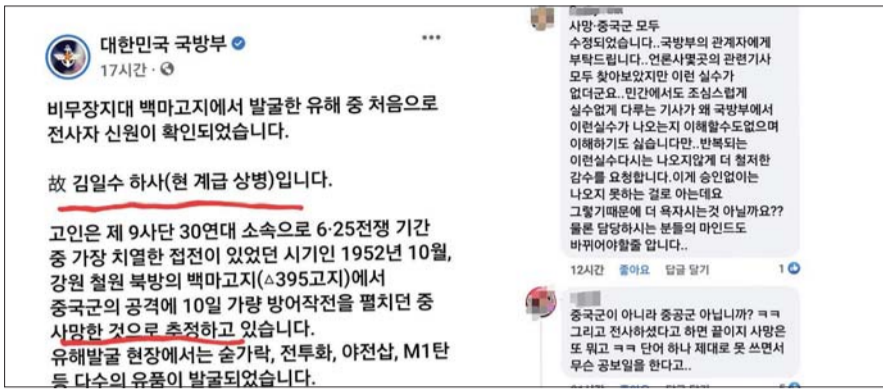
국방부, 전사·전사자 표기 소극적
다수 매체서 보도자료 여과없이 보도
중공군→중국군 표기는 ‘역사왜곡’
SNS·홍보물 제작 등에 오표기 잦아

국방부가 또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해 민심이 들끓었다. 국방부의 용어 사용에 대한 지적은 수년간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지난 7일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백마고지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첫 신원확인 국공용사의 사연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내용을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다. 8일 국방부는 비만이 빗발치자 소 리없이 용어를 수정했다. 물론 이번에도 사과의 글은 올리지 않았다.

◆北는치보나…국방부 전사표현에 소극적

보도자료와 국방부 페이스북에는 ‘전사’를 ‘사망’,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 지대(DMZ)내 강원 철원 백마고지(395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에



국방부가 7일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올린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쟁 참전용사 고(故)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 관련 내용(왼쪽)과 댓글. /편집=문형철기자

대해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 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기술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전사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예우도 순직에 비해 높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확인이라고 표 기는 했지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아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표기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전사자’ 표기가 있었기에 문제가 없지 않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전사 또는 전 사자라는 표기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국방부 기자단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이 전사를 순직으로 표기하는 관행으로 낯게 만들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21일 ‘[어수선하軍] 국방부와 언론은 왜 전사자를 격하시키나?’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도 문화일보와 뉴스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매체들은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보도했다.

◆중국군? 역사왜곡 2018년부터 줄기 차게 이어져

전사 표기뿐만 아니라 중국군이라는 표기도 당시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많은 전쟁사 연구자들의 견해다. 한국은 1992년 중

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를 맺기 전 까지 중화민국(대만)과 수교를 맺었고, 정통성이 있는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해 왔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을 스페인내전 때 이용한 의용군 형태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援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핍박받는 조선인민들을 가엾게 여겨 스스로 참전한 것”이라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을 빼기 위한 꼼수였다.

중국군은 법령상 중국의 ‘국군’이 아닌 중국공산당의 당군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군대를 중국군이라고 표기할 수는 있으나 그 이전의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왜곡’인 셈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이번 정부 들어 심각한 수준에 올랐다. 국방부 관리 하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2019년 6월 14일 기념홍보물을 사색했다. 중화민국 장제스 전 총통의 사진위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그려 넣었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전쟁기념관은 문제의 기념홍보물에 장 전 총통을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로 소개하면서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총통은 한국전쟁 당시, 대만으로 쫓겨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보다 1년 전 국방부는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과 홈페이지에 천청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의 색깔인 붉은색과 노랑색으로 왜곡해 묘사한 웹툰을 게재했다. 이 작품은 국군창설 70주년과 광복군 창설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웹툰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천청백일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뒤늦게 문제가 된 내용들을 수정했지만, 사과를 밝히진 않았다. 본지는 8일 오전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 문제를 알렸지만, 오류는 즉각 수정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거친 댓글이 달린 후 ‘사망’을 전사로 먼저 고쳤고, 한참이 지난 8일 늦은 오후에 중국군을 중공군으로 수정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밀린 월급 신고하세요” 임금체불 집중점검

고용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나서
폐인 임금 지급 ‘간이 대지급금’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떼이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정부가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설 전에 일부 폐인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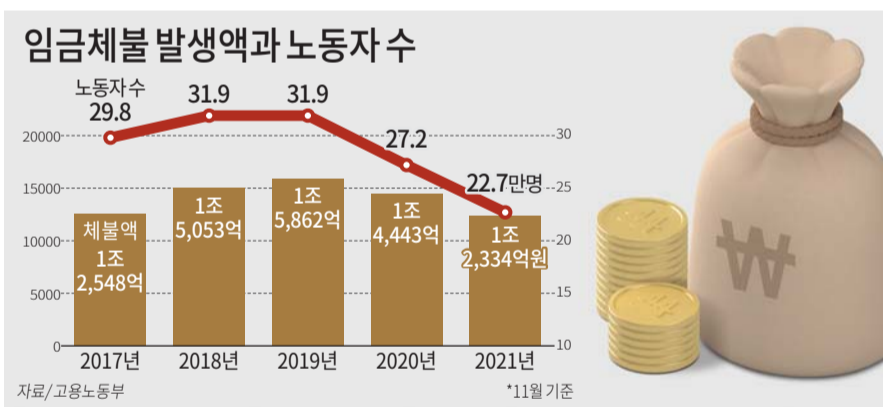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한다.

건설업의 경우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도급을 준 윗 단계 사업장에게 체불 청산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즉시 통보하면, 지자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청도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를 통해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각 노동청은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법 위반 적발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신 폐인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을 실시한다.

해당 노동자가 설 명절 전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용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낮춰 준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도 이자율을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노동자 임금체불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6% 감소했다. 임금체불 청산율은 83.3%로 증가해 남아있는 체불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한 205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방역조치 강화… 경기 하방위험 확대”

한국개발연구원, 1월 경제동향
“산업생산 정체, 수출 증가폭 축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부터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경고했다. 대내적으로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소비 등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해 최근 수출 호조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KDI는 9일 ‘1월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대외 수요의 개선세는 약화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KDI는 “12월 들어 방역조치가 재차 강화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여건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에 오미크론까지 가세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강화돼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0.5% 감소했다. 앞서 10월 2.7%, 11월 5.4%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같은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3.9로 전월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KDI는 “12월 들어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와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지수가 하락하는 등 소비 관련 경제심리가 위축됐다”며 “11월에는 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향후 개선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수출 증가 폭이 축소될 것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부산 남구 신산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

우리 경제를 떠받쳐왔던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KDI는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이 정체되면서 수출의 증가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35.1%), 석유제품(79.2%)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8.3%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전월(32.0%)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수출 물량 지수도 1.5%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5억90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개월 만이다.

KDI는 “무역수지 적자는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KDI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차질,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우려 등 다수의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공급망 교란,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 ‘민원24’서 처리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관련 업무도 ‘민원24’ 등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 불합리한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민원업무 중 신청 건수가 많은 21개 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동의 하에 결

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후 민원인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대한 수수료도 면제된다.

화관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 한정)’의 경우 개인정보장비 작동과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도 없어진다. /세종=원승일 기자